



보도시점 2024. 9. 30.(월) 14:00 배포 2024. 9. 30.(월) 08:00

전략적 인사교류 시행 반년(半年), 어색한 시작 → 부처간 칸막이 해소 성과

- ▲용인산단 환경영향평가 1년 → 4개월로 획기적 단축, ▲지역 거점 국립대 -
출연연 인력·기술이전 촉진 등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연수회서 성과 공유 -

#1. 전략적 인사교류 초기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지만, 업무를 수행할수록 부처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 국토부 국토정책관 안세창>

#2. 양부처의 제도 간 연계성이 있지만 협력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효율적인 행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정책현장에서 정책들이 속도감있게 실현되는 것을 보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합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이제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를 대상으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발굴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해왔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교류 촉진과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간 업무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업이 강화되고 정책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① [환경영향평가 획기적 단축]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인사교류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이 걸리던 작업을 사전검토·평가전담반 운영을 통해 4개월만에 협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② [경자유역-규제특구 연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 혁신기획단장의 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가 연계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실증 위주의 지원으로, 실증완료된 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및 양산 지원은 없었다.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으며, 법 개정 시 실증완료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과제 중심의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간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

① [부적합 농산물 공동조사] 식약처와 농식품부간 과장급 교류를 계기로, 그간 생산(농식품부)과 유통단계(식약처)로 분리된 농산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계하여 부적합 농산물 합동 원인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향후 이상징후에 조기 대처할 수 있으며, 새벽배송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해졌다.

② [고등학생 학습이력 간편조회] 고용부와 교육부 과장급 교류를 통해 고용부의 직무능력은행제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했다.

청년들이 학교에서 이수했던 전문교과(교육부)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고용부)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따로 발급받았으나, 이제 직무능력은행에서 관리할 수 있어 개인의 자료집(포트폴리오) 관리 및 취업에 도움이 됐다.

③ [지역 대학-출연연 동반성장] 교육부와 과기부는 학연 협력 체계 (플랫폼) 사업을 공동 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시도에 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4개 체계(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기술사업화, 연구장비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충청권(이차전지), 호남·제주권(첨단이동수단), 동남권(수소), 대경·강원권(첨단 이동수단, 인공지능)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국정·협업과제, 추가 제기되는 현안 등에서 협업이 긴요한 직위를 적시성 있게 추가 발굴·확대한다.

아울러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교류자가 우수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 인사교류의 범정부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 중심 원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인사제도”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의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부처 간 교류로 시작된 전략적 인사교류는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산하 기관 간, 그리고 지역 간의 협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업 성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 정부업무평가에 협업부문을 신설하여, 전략적 협업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성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책임자	과 장	김수란 (044-201-8350)
		담당자	사무관	김은진 (044-201-8354)
<공동>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책임자	팀 장	한아름 (044-200-2514)
		담당자	사무관	김남윤 (044-200-2519)

□ 추진 배경

-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현안에 대해 부처간 소통 및 협업 강화를 통한 정부 문제해결 능력 제고 및 정책성과 창출
- 정부 내 핵심·전문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범정부적 인적자원 활용 및 정책·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추진 내용

- 범정부적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신설
 - 부처간 갈등 소지가 있거나 상호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성과 제고 가능한 협업과제·교류직위 선정* 및 핵심인력인 국·과장급 교류 실시
 - * 자연보전과 국토발전(환경부-국토부) 등 24개 직위 선정(2.12.)→인사교류 실시(2.29.~)
- 협업 성과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자율점검(월별) 및 범정부적 협업 추진상황 점검(분기별)으로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창출 제고 추진
 - * 24개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에 대해 총 46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관리
- 전략적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강화로 실질적 교류성과 창출 지원
 - 교류수당 대폭 인상* 및 우수교류자 성과급 가산 지급(S 등급의 50% 가산), 희망보직 반영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 * 국장급 80만원 → 최대 150만원 / 3급 70만원 → 최대 120만원 / 4급 60만원 → 최대 100만원 등

참 고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

직위	과제명	인사교류(안)	
국 장 급	①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②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③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④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⑤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과 장 급	⑥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외교부 (개발전략·민간협력과장)
	⑦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⑧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⑨직무능력표준·평가 등의 효과적인 연계 도모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⑩제대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⑪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⑫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개보위 (분쟁조정과장)